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어떤 의미인가 ?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는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①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써 ②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터전¹⁾으로써 ③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의 결사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지역적 유대감은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에게 주어진 물리적 환경으로써 우선 규정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물리적 측면에서만 이해를 할 경우 협동조합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지역사회는 조합원들의 생활터전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제반의 생활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그자체로 정체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내용으로 확장되거나 분화되며,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해야 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조합원 이외의 자들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랜 시간 자기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역기능을 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을 외부로 유출하기도 하였고,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외주화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합원

1) 현대에 이르러 모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유대범위가 동일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고려할 때, 지역의 동일성 및 근접성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중심주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확대와 성장을 가로막는 퇴행의 요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고 보편화 된 것은 1995년 ICA 총회에서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을 채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은 전통적으로 조합원들의 편익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충실해 왔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 서비스 부족, 에너지, 환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자, 협동조합의 사회 기여를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지역사회협동조합의 등장이 그것이다.

1970년대 경제 위기에 의한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퇴조는 협동조합에게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반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협동조합 경제 시스템에 기초해 살아갈 수 있는 큰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은 이렇게 조합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이처럼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의 유대범위와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단위로써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동경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작동되어야 하는 기초단위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특정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욕구와 이해에 부응하는 것으로 만족 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 시스템의 토양이 바뀌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선험적 인식에 근거한다. 지역에서 협동경제시스템의 실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체이자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이로운 협동조합이 많이 등장하고 주요한 경제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과정이 ‘승자 독식’의 논리로써가 아니라 협동조합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신념·사람·시간·협동’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2. 협동조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 2012년 3월 Euricse(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와 ICA가 공동주관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 이해 추진 회의’가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많은 학자들은 협동조합이 경제에 기여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하였다.

첫째, 협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줄이는 데서 적지 않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및 대다수 시민들의 복지 증가에 기여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니는 독특한 소유권과 거버넌스 원칙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소유권 구조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시장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독점 형성을 방지하며 소매 가격을 낮추고 혁신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간다.

둘째, 협동조합은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 농업 등 상당한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분야에서 그러하다. 유럽의 협동조합 은행과 북미의 신용조합은 은행 시스템에서 안정화 역할을 해 왔다.

이전 경기 침체 시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협동조합의 안정화 역할은 위기시기에 결정적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의 존재는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의 대응능력을 증진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한다.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유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 기업이 무관심하고 정부와 같은 공적기관이 공급할 수 없는, 마이너스는 아니라도 낮거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종종 생산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서비스는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와 이외 개인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마이너스 수익성 경우, 협동조합은 추가적인 자원 -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등 - 을 끌어들이거나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경영 맥락과 관계없이 초기 단계에서 자원 활동과 기부가 특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협동조합은 종종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자원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고려하고, 이에 관여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에 관한 ICA 협동조합 제3원칙에 상응하게, 수많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잉여 중 일부를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공유의 비분할 적립금에 배정한다. 일부 국가는 협동조합의 장기적 관점을 법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이 연간 잉여의 일부를 비분할 자본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자산과 이윤의 일부분을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익 증진에 써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이윤 축적을 생각지 않기에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로,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청구함으로써 자원을 재분배한다.

이처럼 협동조합 사업체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증가를 지원하며, 부의 보다 균형적인 분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역시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있다.

3.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 -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의 외부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에 있다. 기존의 지역경제개발 전략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외부기업의 지역 유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주민들은 소비주체 또는 지불주체로 전락하게 되어 돈이 지역 사회에서 재투자되거나 순환되지 못해 지역사회는 가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왔다.

이에 대응해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생산, 유통,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경제 주체로써 협동조합은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다. 지역의 필요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지역 당사자들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탈지역화 된 투자자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영리기업에 비해 지역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imberly A. Zeuli(1998)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7가지를 꼽고 있다.

①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 :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 기업에 대응할 수 있음.

- ②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수익성이 낮아도 지역사회와 주민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예. 돌봄, 교육, 육아, 신용 등)
- ③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생산자 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하여 조합원과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
- ④ 지역사회의 통합 : 소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주민들 간의 관계의 기회와 장을 제공
- ⑤ 지역인구의 증가 : 협동조합 사업체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인구를 증가
- ⑥ 인적자원의 개발 : 협동조합 활동 및 사업은 그 자체로 지역의 리더십 개발의 기회로 기능(예. 의사소통, 집단적 문제해결 등의 훈련의 장)
- ⑦ 환경문제 유발 축소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음(황영모, 2012)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의 현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고용과 임금에 대한 연대의식, 생산과 구매의 연계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에게 ‘혁신’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해외 협동조합 사례

1. 뉴돈(New Dawn) 유한회사

- 소재지 : 캐나다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 설립 : 1973년, 비영리 부동산 포트폴리오기업집단
- 목적 : 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한 지역사회 공동체 이익 추구 (협동조합, 신협, 노동 및 노인 관련 주민 단체들이 참여)
- 사업 : 부동산 포트폴리오(저소득층 주택, 노인보호시설, 치과 등) 운영, 지역사업 투자 기금 회사 운영 등
 - 설립 당시 은행 차입을 통해 폐건물 구입 후 주택 및 부대 시설 유지
 - 폐지되는 군사 시설을 인수해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해 노인 가정 돌봄 사업을 실시(노인 가구와 일반 가정가구를 입주시켜, 일반가정에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특성 :

- 1인 1표 제도와 공동체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 협동조합 형식을 변형.
- 지주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보유한 비영리 추구
-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추구
- 자원봉사들에 의해 운영

※ 시사점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섬.
- 전통적 협동조합 방식에 메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방식을 취함
- 조직 운영 형식의 융통을 취함에도 1인 1표 제도를 두어 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주요한 방법으로 부동산이라는 수단을 채택하였으며, 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 그레그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한살림, 2012)』 재구성

2. Chac Lol 협동조합 : 유카페 개발협동조합 프로젝트

- 소재 : 멕시코 유카탄 반도 매리다
- 설립 : 1989년 Chac Lol 협동조합 설립, 1994년 프로젝트 시작
 - 6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 소규모 가내 신발 수공업자, 소규모 옥수수 제분 및 토띠아 가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트랙터, 운송용 트럭, 농업지대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농장 노동자 200명 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
- 목적 :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역 농업 및 경제 보호와 일자리 문제 해소
- 사업 :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 BCA Holdings(뉴돈의 자회사로 기금운용회사)와 멕시코의 차핑고 대학, Chac Lol 협동조합의 동업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
 - 사업 진행과 함께 유카타 대학, 국립 인류학과 역사학 연구소, 마야브 대학 합류
 - 호텔 사업 (마야생태공원 조성하고 마야 스타일의 숙박시설 설립)
 - 식물원과 수목원 조성(식물원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종을 보유)
 - 약초재배 단지 조성 (취약한 의료시설 등을 고려해 약초의료 클리닉 건립계획)
 - 관광업(마야인의 실거주지, 유적, 마야인의 언어 등을 활용한 전통 마을)
- 특성 :
 - 지리적, 지형적 유사성을 갖는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과의 공동사업 방식으로 앞선 경험과 기술 등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접근
 - 국내외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지역과 문화에 친화적인 신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
 - 국제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조합원 대표와 조합원은 영어 학습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 시사점

- 선진 기술의 이전과 해외의 경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성장을 병행
- 전문가 그룹 및 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많은 준비기간을 통해 사업 방안 마련
- 지역 자원의 활용과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부각하는 사업의 개발

자료 : 그레그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한살림, 2012)』 재구성

4.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과제

※ 이 장에서는 외부 환경으로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을 서술하지 않겠다.

IMF 이후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양적 성장을 해 온 사회적경제는 ‘정책과 행정의 과잉’이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도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나, 그 구성 요인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과제를 서술한다.

1) 지역차원의 지역순환경제 비전 수립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주변화 되어 왔다. 이는 협동조합이 블록화 되기보다는 개별화 되어 왔기 때문이며,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업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1) 비전 수립의 기초

특정 유대 관계에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상하거나 기존 사업 조직을 중심으로 순환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좀 더 큰 시각으로 지역차원의 협동경제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의 경제 활동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

가격과 이윤측면에서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거리, 교통 등의 문제로 가격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

하기도 한다.

둘째, 공급의 독점으로 인해 가격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문

생활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문으로 공공요금 에너지, 교통 등이 그러하다.

대안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가 현재의 공급 질서와 다른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공유경제 및 재사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개별소유에서 공동소유로, 구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생활재들은 무수히 많다. 주택, 차량, 의류, 가구, 가전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구매비용이 너무 과다하거나 사용빈도가 낮으나 필요한 생활재들을 사고의 전환을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다.

넷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지 못하고 소비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끊임없는 지불을 통해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태양열을 이용한 자가발전이 그러하고, 품앗이 활동을 통한 서비스 교환이 그러하다.

이러한 비전 수립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의 수집과 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필수이다.

또한 지역 자원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자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분석과 민간 자원의 파악과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장·단기 계획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기준의 마련

퀘벡, 몬드라곤, 임실치즈 마을, 성미산 마을, 원주 등의 사례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절대적 시간’과 그 시간을 이겨 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 자원, 역량 등의 제한성으로 인해 끈임 없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은 비전과 목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비전과 목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집중은 상황논리에 좌우되기 쉽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은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체는 주민과 활동가이다.

‘주민 조직화’, ‘주민 주체’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업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는 촉진자로 역할 하는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절대적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지역의 필요를 조직하는 과정이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촉진자로 역할 하는 활동가들의 전문화와 자기 성장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은 사회적경제 진영의 고령화와 구태의연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개인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 과정은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적 활동이나 소모적 활동이 아니라 분야의 기능인으로 성장하거나 전문화 될 수 있는 측면을 주되게 고려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이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①긴급성 ②확장성 ③지속성 ④고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긴급성이라 함은 필요함에도 결핍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확장성은 대중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긴급성과 맞물릴 경우 제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IMF 이후 여성의 취업 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 및 가족 돌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주요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 그러하다.

지속성은 지속적 수요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불 가능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불가능성의 문제는 자기 부담률의 조정을 통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안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정성은 외부 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이다. 즉, 반드시 지출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들인데, 의·식·주·교통·에너지 등이 그러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소비 또는 지출 규모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유경제’가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

2)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의 확대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협동조합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보다는 지역 차원의 보편적 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이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무방하다.

자본 동원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보다는 일반협동조합이 조합원 확대에 좀 더 유리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다는 점을 중심으로 놓고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특정 조합원 그룹의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협동조합은 다목적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목적성을 갖는 협동조합은 세부 사업 단위 실현을 위한 사업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새로이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법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업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 지역의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지주회사로서의 위상을 갖고 사업조직은 자회사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시키고, 사업과 활동을 분산시켜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자원의 효율성과 외연의 확장, 사업의 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할 수 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개인과 조직의 물적 출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농협, 신협, 생협,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공헌기금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자원조달에 있어 정부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물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연대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의 수준이 그러지 못해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기초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 상태로 전락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진영의 협력과 연대의 목적 및 목표의 명확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성장 해 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연대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사회경제연대체 등이 조직되고 있는데, 상호 관계성을 맺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대 활동의 이니셔티브나 멤버십의 공감대 및 유대감의 차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상호연계를 통한 관계 형성을 통해 통합적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칭하지 않고 사회적경제라 칭한다.

(1) 내부 거래 활성화

요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적경제 진영 내 상호협력에 기초한 내부 거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와 ‘연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 거래는 관련 당사자 집단의 결의와 관련 당사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조직 내부에서 내부 거래에 대한 필요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조직이 클수록, 사업 기간이 오래되어 거래 상대방이 안정되어 있는 곳 일수록, 물품 조달 및 거래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한 조직 일수록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 의사결정을 한다 해도 반드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부정적 신호는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내부 거래를 고민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볼륨이 커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상호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수요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에 관한 필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생산품의 다양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이 내부거래를 이룰 수 있는 상호간의 파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거래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내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의단위가 부재해 과잉과 결핍 사업 분야가 대비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물적 기반 형성을 위한 기금 조성

‘내부 거래’와 함께 ‘사회적경제 진영의 연대 기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제한 외부의 금융시스템 마련이나, 공공기금에 의한 기금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는 위탁사업을 증가시켰는데,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자금의 용도와 규모가 통제되지 않으며, 장기적 계획에 의한 사업의 지속성 보다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탁사업의 확대는 사회적경제 진영을 활성화 시킨 긍정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기발전전략 부재를 낳은 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기금 조성은 위탁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자율과 자치성에 기초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진영이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일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역시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협동조합, NPO, 노동조직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함께, 적더라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 조성은 사회적경제 진영 상호간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필요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점에서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내부 거래와 병행된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3) 코디네이터 기능과 자원 혼합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관협력에 기초한 위탁사업이나, 사업자 지정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IMF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 된 측면이 크고,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에 의한 공인 과정이나 선별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설계는 행정에 의한 공인과정과 선별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실무 기관으로써 또는 인큐베이팅 기관으로써 각종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개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강내영 2008)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칭하고 있는 각종의 지원센터들은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자원혼합의 연계 기능이나, 이 과정을 위해 동반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함께 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개별의 이해 관계를 떠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과 통합을 매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조직이다.

그렇기에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상호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신뢰와 통합 기획력, 다양한 자원을 혼합할 수 있는 자원 동원력이 중요하다.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으로부터 규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역할 할 것이가에 대해 사회적경제 진영은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체의 역량 강화 -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

사회적경제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 모두를 위해 활동 주체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어 ‘교육 과잉’이라 할 정도 이다. 그러나 그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그 교육의 초점은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초 교육과 실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은 철학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운영 방법론을 찾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다.

주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실천 할 수 있는 구상과 방법론에 대한 유연함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사업과 생활에서 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력이 풍부해지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공급되는 교육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익히고 터득하는 자기 학습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것을 학습의 장으로 학습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과 만나는 과정이, 연대 활동의 장애를 만나는 순간이, 타지역의 사례를 접하는 순간 모두가 학습의 기회이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과 종합을 통한 과정이 우리에게서 상호 교육이며,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공통의 해결방법들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논의를 상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예민한 이슈들을 공론화 하고 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차원의 합의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실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연대 활동의 과제이자, 연대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그레그 맥레오드(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협동조합연구소, 이인우 역
- 강내영(2008) 「새로운 시도, 일본의 중간지원조직(中間支援組織)을 중심으로」, 풀 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문보경(2013) 「사회적경제 최근 동향과 과제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남고용포럼 토론회
-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 구상」, 전라북도 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 협동조합연구소(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한 살림
- icoop(2013)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이해 촉진」, Euricse, 이경수 역